

■ 대한민국 경제 행복지수

-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2008. 7. 7

■ 제2회 대한민국 경제 행복지수
- 조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1
2.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6
3.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의 종합적 시사점	24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요건 등에 의해 변화된다. 경제적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5개 하위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 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 또 다른 요소인 ⑥전반적 행복감과 가중 합산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하였다.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의 목적은 한국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을 측정하여 관련된 사회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이며, 2007년 12월 부터 매 6개월 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제2회 조사보고서로서 2007년 12월 제 1회 조사에 이어 2008년 6월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065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작성되었다.

2. 경제적 행복지수 조사 결과

(경제적으로 더 불행해진 대한민국 국민들) 2007년 하반기 조사와 비교하여, 2008년 상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모든 항목에서 하락하였다. 39.9점(100점 만점)이던 2007년 하반기의 경제적 행복 지수는 최근 6개월 동안 5.1p 하락하여 2008년 상반기에는 34.8로 조사되었다. 항목별로는 경제적 안정(42.5, ▽2.1p), 경제적 우위(45.7, ▽0.1p), 경제적 발전(41.6, ▽4.6p)의 하락폭 보다 경제적 양극화를 나타내는 경제적 평등(16.1, ▽8.9p)과 물가·실업률에 대한 우려인 경제적 불안(16.9, ▽7.6p)이 크게 하락하였다. 이는 최근의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급등과 이로 인한 일자리 및 생활 불안, 그리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도 크게 실망한 모습을 보임)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해서도 2007년 하반기 결과치인 136.0보다 12.9p 하락한 123.1로 조사되었다. 이는 비록 현실은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포기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경제적인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희망의 정도가 최근 6개월 동안 크게 좌절된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지역은 충북, 가장 불행한 지역은 전남) 전국 16개 시도별 경제적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충북이 43.5로 가장 높고 전남이 26.7로 가장 낮았고 두 지역의 격차는 16.8이었다. 서울은 35.6으로 16개 시·도 중 7위를 차지하였다. 대전(34.4), 광주(32.0), 울산(32.0), 인천(30.4)이 나란히 11~14위 차지하여 광역 대도시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15위와 16위인 제주 (29.3)와 전남 (26.7)을 제외하면 도지역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다. 충북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충북의 실질 성장률이 6.6%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특히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7.7%로 전국 최고일 정도로 지역경제가 성장한 반면에 1인당 민간소비 지출 수준은 87.0(서울 117.2)로 실질 생활비는 적게 들어 경제적으로 상대적인 여유가 있었고, 낙관적인 지역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경제적으로 행복한 전문직과 공무원들) 직업별로 살펴보았을 경우 전문직과 공무원이 경제적으로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직은 경제적 순위와 경제적 발전에서 12.9p와 3.1p가 상승하였고, 전반적인 경제적 행복감도 8.7p가 상승하여 지금 같은 불황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전문직의 경제적 불안과 경제적 행복 예측에서는 각각 33.2p와 34.6p가 감소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과 미래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었다. 전문직과 공무원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업, 모든 항목에서 경제적 행복은 하락하였다.

(연령대에 따른 우하향 추세가 뚜렷하고, 노년층의 경제적 행복은 심각한 수준)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경우, 20대가 가장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느끼고 60대는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우하향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50대와 60대의 경제적 행복 지수는 30을 하회할 뿐 아니라 경제적 행복 예측도 각각 20.2p, 15.0p 하락하여 100을 하회함으로써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유럽 등 복지국가 국민의 행복지수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40대에 최저점을 이루고 그 전후가 높은 U자형 추세임을 감안할 때 한국의 우하향 추세는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크고, 특별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또한 현재 급격한 노령화가 진전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더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경제적 행복지수도 소득과 자산, 학력에 따른 양극화의 움직임이 뚜렷해져) 경제적인 행복을 소득, 자산, 학력별로 살펴보면 경제적인 행복과 소득, 자산, 학력 수준은 정확히 비례하여 상관관계가 매우 높았다. 하지만 전 계층에서 경제적 행복지수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군, 고자산군, 고학(력)군의 경우, 6개월 전보다 경제적 행복지수가 상승하는 경제적 행복지수의 양극화 움직임이 뚜렷했다. 반면에 경제적 행복 예측의 경우 고소득, 고자산, 고학력 계층의 경우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에서 다른 계층보다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이같은 상반된 모습은 고소득군, 고자산군, 고학력군의 경우, 현재는 경제적으로 선택받은 집단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미래 경제 환경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크게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혼(未婚)자들의 경제적 행복 지수 하락이 두드러져) 미혼자들의 경제적 행복도가 기혼자들의 행복도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격차는 지난 조사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미혼자들의 행복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은 20~30대 젊은 층의 경제적 행복도가 크게 떨어진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청년실업, 신규인력 수요 급감 등으로 경제적 초년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혼자들의 경제적 행복 예측도 13.6p 하락하여 기혼자들 보다 하락폭이 컸는데, 이는 가족부양, 자녀교육, 주택문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미혼자들마저도 경제적 활력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시사한다.

경제적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정부의 경제정책)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적 행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신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귀하의 경제적 행복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전체 917명의 응답자 중에서 37%가 ‘전혀 아니다’, 25%가 ‘조금 아니다’로 응답하여 전체의 62%가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신의 경제적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신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실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경제적 행복 증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의 비율이 29%로 가장 높았다.

3. 경제적 행복지수의 종합적 시사점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충청지역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 학력의 20대 미혼 여성 전문직 또는 공무원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학력이 낮고 자산과 소득이 없는 60대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하락하고 있는 경제적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 구현이 시급) 6개월 전인 참여정부 말기와 비교하여 하락하고 있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하락 폭이 큰 경제적 불안(7.6p 하락)과 경제적 불평등(8.9p 하락)의 해결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체감경기를 활성화 하고, 노후대비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서민을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경제적 행복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복지 균형 확대가 필요) 소득별, 자산별, 학력별, 직업별, 연령별 경제적 행복의 양극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복지 균형의 확대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저학력층, 저자산층 등 경제적 약자 계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고, 교육권, 의료권 등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 초년층인 20대와 노년층의 경제적 행복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 진입기와 은퇴기에 개인이 경제적 부담에 대한 공적 영역의 보호를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미래에 대한 의욕 저하를 희망으로 전환 시켜줄 수 있는 경제정책 실현이 필요) 미래에 대한 의욕 저하를 조기에 수습하고 실망을 희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치적인 경제 성장에 구속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으로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으로 행복해 질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정부 초기의 ‘경제만 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을 지양하고, ‘국민을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하기 위해 경제를 발전 시킨다’는 철학으로 경제적 약자 보호, 성장효과의 분배 등의 미세한 경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요구된다.

제2회 대한민국 경제 행복지수 조사결과

1. 경제적 행복지수의 개요

○ 경제적 행복지수의 정의

- 경제적 행복지수란 개인이 경제적 요인과 관련하여 만족과 기쁨을 느끼는 상태에 대한 평가로서 경제상태, 의식, 외부 요건 등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EHI(Economic Happiness Index)로 명명

○ 경제적 행복지수의 목적

- 경제적 행복의 의미를 정의하고, 우리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경제적 행복지수를 일정주기별로 반복적으로 측정하여 발표함으로써 관련된 사회 정치적 의사결정의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 향후 반기 1회씩(6월, 12월) 경제적 행복지수를 발표하고자 함

○ 경제적 행복지수의 구성 요소

-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행복을 구성하는 5개 요소는 ①경제적 안정 ②경제적 우위③경제적 발전 ④경제적 평등 ⑤경제적 불안이며, 각각의 요소를 지수화 한 후, 연산하여 경제적 행복지수를 산출함

<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

하위 지수	이론 및 근거	내용
경제적 안정 지수	Maslow(1934) Need theory	어느 일정 수준의 경제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다음 단계의 욕구로 진행되지 않음
경제적 우위 지수	Frank Robert(1986)	사람은 그가 속한 사회에서의 상대적인 경제적 지위에 따라 행복을 느끼는 수준이 다름
경제적 발전 지수	Daniel Kahneman(1979) Prospect theory	경제적 발전 가능성이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경제적 평등 지수	Veenhoven(2006) Inequality-Adjusted Happiness	개인의 경제적 행복은 소속 집단에서의 경제적 불평등도에 의해 차이를 나타냄
경제적 불안 지수	Okun(1976) Misery Index	물가, 실업률 등 외부 요인이 개인을 불안하게 하는 작용을 함

○ 경제적 행복지수의 계산 방식¹⁾

- 경제적 행복지수(EHI)는 '5개 하위지수' 와 '전반적 행복감' 의 종합으로 이루어짐
- 5개 요소 하위지수는 각각 긍정 100점, 반반 50점, 부정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낸 점수임

1) 계산방식과 가중치는 경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업호감도지수 (CFI, Corporate Favorite Index)의 계산방식을 준용함

- 전반적 행복감은 경제적 행복의 정도를 직접 물어서,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100점, 보통이다 50점,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다 0점으로 하여 평균을 냄
- 경제적 행복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 중간값 50점임

$$EHI = \frac{\frac{\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 \textcircled{5}}{5} + \textcircled{6}}{2}$$

○ (경제적 행복 예측) 미래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즉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

- 경제적 행복지수와는 별도로 경제적 행복의 변화에 대하여 예측해 보고자 독립된 별도 문항을 측정하여 지수화 하고자 함
 -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에 대하여 질문하여, ‘그렇다’ 와 ‘아니다’ 의 비율의 차에 100을 더하여, 100 이상이면 경제적 행복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100 미만이면 그 반대임 (BSI 산출방식과 동일)
 - 예로써 ‘예’ 가 60% 이고 ‘아니오’ 가 40% 이면 $60 - 40 = 20$ 에 100을 더하여 120이 지수가 됨
 - 경제적 행복예측은 최소 0점에서 최대 200점, 중간값 100점임

○ 경제적 행복지수의 설문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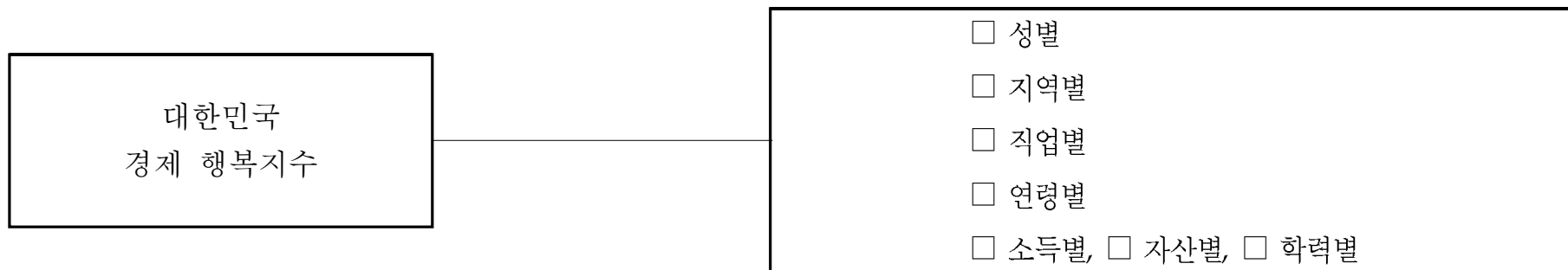
구분		질문	답변
경제적 행복 구성 요소	경제적 안정	나(또는 귀댁의 가장)의 일자리와 소득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내 노후의 경제상황은 안정적일 것 같다.	(1)그렇다 (2)반반이다 (3)아니다
	경제적 우위	나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나은 편이다 최근 6개월간 경제적 열등감으로 마음 상한 경험이 있다.	
	경제적 발전	나의 소득, 자산 등 경제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나의 경제적인 생활수준은 나아지고 있다.	
	경제적 평등	현재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 우리사회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평등해 질 것이다.	
	경제적 불안	내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나를 불안하게 한다. 내가 느끼는 체감 실업률은 나를 불안하게 한다.	
전반적 행복감		나는 경제적으로 행복하다.	
경제적 행복 예측		나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보다 행복해 질 것으로 생각한다.	(1)예 (2)아니오

○ 조사의 개요

- 조사 기간 : 2008년 5월 6일 ~ 5월 16일(8일간),
(본 조사는 제2회 조사로서 제1회 조사는 2007년 12월 3일 ~ 12월 10일에 실시됨)
- 조사 주최 :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신문 공동 주최
- 조사 방식 : 지역별 최소 할당과 인구 비례에 의한 배분에 의하여 전화설문을 통해 전국 1,026개 샘플을 수집
- 조사 대상 : 전국의 20세 이상의 경제활동 중인 성인 남녀 (학생 제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서울/일산/분당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 결과 분석



2. 조사 결과

○ 경제적으로 더 불행해진 대한민국 국민들

- 2007년 하반기 조사와 비교하여, 2008년 상반기 경제적 행복지수는 모든 항목에서 하락

- 2008년 상반기의 경제적 행복 지수는 34.8로 2007년 하반기 조사 결과인 39.9 보다 5.1p 하락
- 100점 만점에 39.9점(2007년 하반기 조사 결과)으로 절반에 못 미치던 경제적 행복 지수가 2008년 상반기에는 더욱 하락한 것으로 보아 지난 정부 말기보다 새정부 초기에 경제적 불행이 더욱 커졌음

<전체/성별 경제적 행복지수>2)

	경제적 안정 ³⁾		경제적 우위		경제적 발전		경제적 평등		경제적 불안		전반적 행복감		경제적 행복지수		경제적 행복 예측	
	점수	변동	점수	변동	점수	변동	점수	변동	점수	변동	점수	변동	점수	변동	점수	변동
남성 (480)	40.7	▽3.0	44.3	▽1.0	40.9	▽5.6	17.4	▽11.0	18.1	▽7.3	35.2	▽3.4	33.7	▽4.5	115.0	▽20.1
여성 (546)	44.4	▽3.3	47.0	▽1.2	42.3	▽5.9	14.8	▽8.1	15.7	▽9.1	38.8	▽5.7	35.8	▽5.6	131.1	▽5.9
전체 (1026)	42.5	▽2.1	45.6	▽0.1	41.6	▽4.6	16.1	▽8.9	16.9	▽7.6	37.0	▽4.7	34.8	▽5.1	123.1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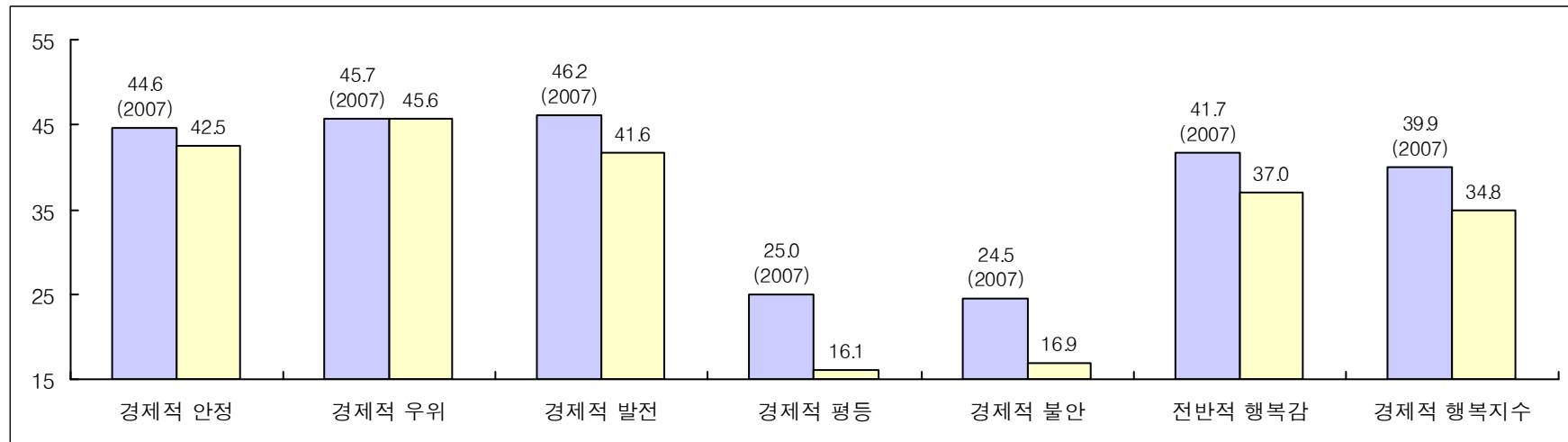
2) 보고서내 모든 표에서 ()안은 응답자의 수임.

3) 각 항목의 우측 칸은 2007년 하반기 조사와의 격차를 나타냄

○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의 확대가 경제적 행복을 낮춘 가장 큰 요인

- 항목별로는 경제적 안정(42.5, ▽2.1p), 경제적 우위(45.7, ▽0.1p), 경제적 발전(41.6, ▽4.6p)의 하락 폭 보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경제적 평등(16.1, ▽8.9p)과 물가·실업률에 대한 우려인 경제적 불안(16.9, ▽7.6p)이 크게 하락함
 - 이는 최근의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폭등과 이로 인한 일자리 및 생활 불안, 그리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

<항목별 경제적 행복 지수 비교>



○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도 크게 실망한 모습을 보임

-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해서도 2007년 하반기 결과치인 136.0보다 12.9p나 하락한 123.1로 응답하여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 낙관적, 의욕적 모습에서 크게 실망한 모습을 보임⁴⁾
 - 2007년 하반기 조사(제1회 조사)에서는 현재의 경제적 행복 수준은 39.9로 50을 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경제적 행복에 대한 예측은 136.0을 기록하여 100을 크게 상회
 - 2008년 상반기 조사(제2회 조사)에서는 남성은 20.1p 하락한 115.0, 여성은 5.9p 하락한 131.1로 조사되었고, 전체적으로는 123.1로 6개월 전보다 12.9p 하락함
- 이는 비록 현실은 경제적으로 행복하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포기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여 경제적인 행복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와 희망의 정도가 최근 6개월 동안 크게 좌절되었음을 시사
 - 지난 조사 시점인 대선 레이스에서 신정부가 보여주었던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무너지고 있고, 현재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실망을 지나 미래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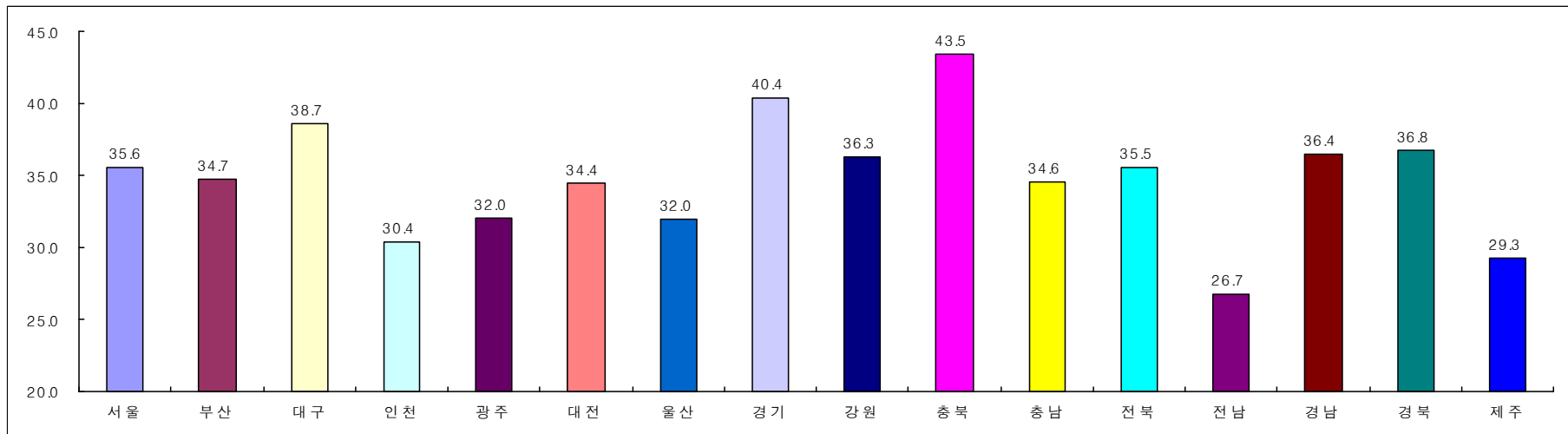
4) 경제적 행복 예측은 200점 만점으로, 100점을 기준으로 100보다 커질수록 미래의 경제적 행복을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음으로 해석함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지역은 충북, 가장 불행한 지역은 전남

- 전국 16개 시도별 경제적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충북이 43.5로 가장 높고 전남이 26.7로 가장 낮았고 두 지역의 격차 역시 큰 차이(16.8)를 보임. 서울은 35.6으로 16개 시·도 중 7위를 차지함
 - 충북은 경제적 안정(48.8)과 경제적 우위(54.4), 경제적 발전(47.6)에서 다른 시도보다 높은 행복감을 보였고, 또한 경제적 평등(21.4)과 불안(24.2)에 대해서도 타 시도보다 낙관적인 응답을 함
 - 전남은 경제적 안정(34.4), 경제적 우위(35.2), 경제적 평등(11.9) 등 5개 항목 중 3개 항목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함. 전남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것은 2006년 지역 성장률이 2.8%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또한 건설 및 설비투자형성이 낮은 것도 행복지수 하락의 요인이라고 파악됨. 특히 산업구조가 서비스업이 39.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51.2%인 전라북도와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교육, 의료 등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배경도 작용했을 것임
 - 충북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높은 것은 충북의 실질 성장률(2006)이 6.6%로 전국 평균 5.1%를 크게 상회하고, 특히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7.7%로 전국 최고일 정도로 지역경제가 성장한 반면에, 1인당 민간소비 지출 수준은 87.0(서울 117.2)로 실질 생활비는 적게 들어 경제적으로 상대적 여유가 있었고, 낙관적인 지역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됨
- 대전(34.4), 광주(32.0), 울산(32.0), 인천(30.4)이 나란히 11~14위 차지하여 광역 대도시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15위와 16위인 제주(29.3)와 전남(26.7)을 제외하면 도지역보다 낮은 모습을 보임
 - 대전, 광주, 인천의 경우 지방 광역 대도시의 경기침체와 팍팍한 삶의 질이 경제적 행복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울산의 경우, 1인당 지역총생산은 38,367천 원(전국 평균을 100으로 할 때 216)일 정도로 소득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경제적 우위를 느끼기 어려운 환경, 높은 소비수준, 낮은 지역내총생산 증가율(1.4%) 등이 경제적 행복을 저해하는 것으로 분석됨
- 종합하면 행복한 지역은 “성장한 지역보다는 성장하고 있는 지역“, “절대소득보다는 삶의 질이 높은 지역“, “경쟁강도가 낮은 지역“, “낙관적인 지역정서가 형성된 지역“으로 요약할 수 있음

<지역별 경제적 행복지수>

	서울 ⁵⁾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	제주
경제적 안정	44.0	42.6	46.0	35.1	41.0	44.3	41.4	53.6	44.9	48.8	43.1	41.4	34.4	41.0	40.4	40.4
경제적 우위	44.4	41.0	48.4	42.3	50.0	41.7	41.8	49.1	49.6	54.4	47.0	44.4	35.2	49.2	49.3	44.6
경제적 발전	43.5	44.7	38.1	44.4	32.8	43.4	40.2	42.9	43.6	47.6	40.5	44.4	39.3	45.7	38.6	36.3
경제적 평등	19.9	15.2	22.6	13.7	10.9	17.5	13.7	17.0	13.6	21.4	15.9	15.5	11.9	17.2	13.6	13.8
경제적 불안	21.1	19.3	17.1	14.9	13.3	17.5	10.5	18.3	12.3	24.2	13.8	15.5	15.2	19.9	16.5	15.8
전반적 행복감	36.6	36.9	42.9	30.6	34.4	36.0	34.4	44.6	39.8	47.6	37.1	38.8	26.2	38.3	41.9	28.3
경제적 행복지수	35.6	34.7	38.7	30.4	32.0	34.4	32.0	40.4	36.3	43.5	34.6	35.5	26.7	36.4	36.8	29.3
지역별 순위	7	9	3	14	13	11	13	2	6	1	10	8	16	5	4	15
경제적 행복 예측	129.6	131.1	127.0	103.2	103.1	101.8	112.5	128.6	159.3	117.5	110.3	127.6	141.0	137.5	129.4	113.3



5) 서울은 일산과 분당을 포함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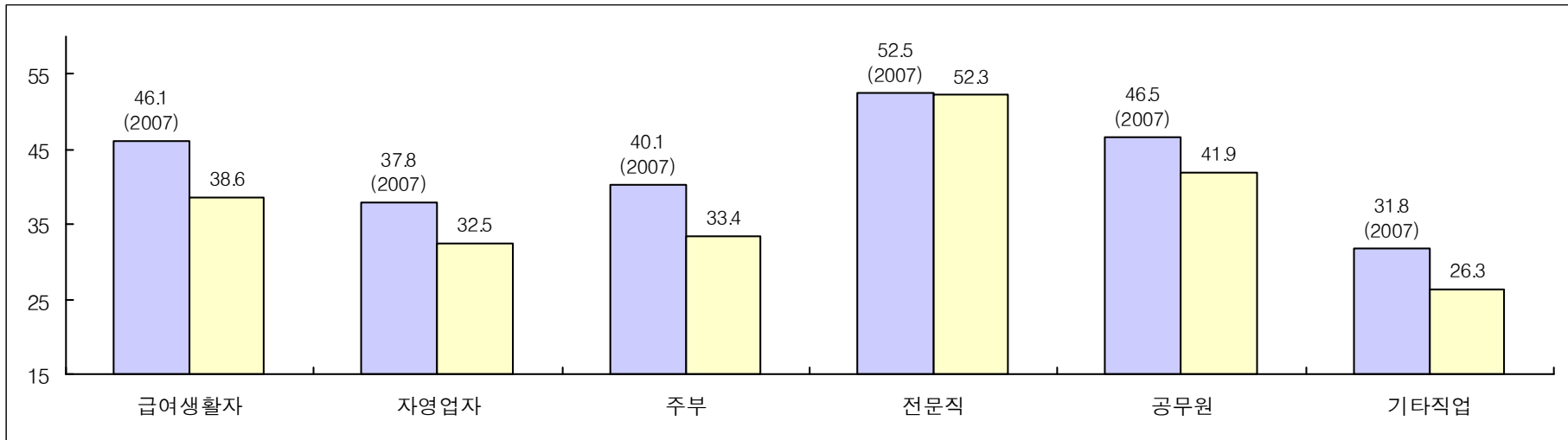
○ 경제적으로 행복한 전문직과 공무원들

- 직업별로 살펴보았을 경우 전문직과 공무원이 경제적으로 가장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불황에 강한 모습을 보임
 - 전문직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52.3으로 공무원(41.9)과 함께 가장 경제적으로 행복한 직업군으로 나타남
 - 특히 전문직은 경제적 순위와 경제적 발전에서 12.9p와 3.1p가 상승하였고, 전반적인 경제적 행복감도 8.7p가 상승하여 지금 같은 불황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약진하는 모습을 보임
 - 반면 전문직도 경제적 불안과 경제적 행복 예측에서 각각 33.2p와 34.6p나 감소하여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안정성과 미래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었음
 - 한편 경제적 안정은 공무원이 61.3을 부여하여 전체 직업군 중에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응답했고, 자영업자의 36.0과 25.3의 격차를 나타냈음

- 전문직과 공무원의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업, 모든 항목에서 경제적 행복은 하락
 -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주부, 기타직업(무직)은 경제적 행복과 관련한 모든 세부 항목에서 이전 조사결과 보다 하락
 - 특히, 자영업자는 기타직업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경제적 행복지수에 32.5를 부여하였고, 경제적 안정과 경제적 순위에서도 가장 낮은 응답을 보여 다른 직업군에 비해 열악하고 불안정한 현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직업은 미래 경제적 행복 예측에 85.9로 응답하여 미래에 경제적으로 더 불행해 질 것이라고 응답함

<직업별 경제적 행복지수>

	급여생활자		자영업자		주부		전문직		공무원		기타직업	
경제적 안정	47.7	▽1.6	36.0	▽3.9	41.8	▽7.3	54.2	▽18.9	61.3	▽8.1	30.0	▽6.6
경제적 우위	48.7	▽4.6	42.6	▽0.4	45.1	▽2.7	66.7	12.9	52.4	▽8.2	38.9	0.8
경제적 발전	52.1	▽11.3	39.5	▽1.2	35.5	▽6.4	64.6	3.1	52.4	▽17.6	22.8	▽8.9
경제적 평등	15.8	▽9.7	16.5	▽8.2	13.7	▽11.3	6.3	▽9.2	13.3	▽8.0	23.1	▽5.6
경제적 불안	18.1	▽13.3	18.0	▽5.7	13.5	▽9.9	18.8	▽33.2	21.4	▽9.9	16.3	▽0.3
전반적 행복감	40.8	▽6.7	34.5	▽6.6	36.9	▽5.9	62.5	8.7	43.5	1.0	26.3	▽6.8
경제적 행복지수	38.6	▽7.5	32.5	▽5.3	33.4	▽6.7	52.3	▽0.2	41.9	▽4.6	26.3	▽5.5
경제적 행복 예측	138.2	▽18.2	121.4	▽10.2	120.4	▽14.9	150.0	▽34.6	135.5	▽34.5	85.9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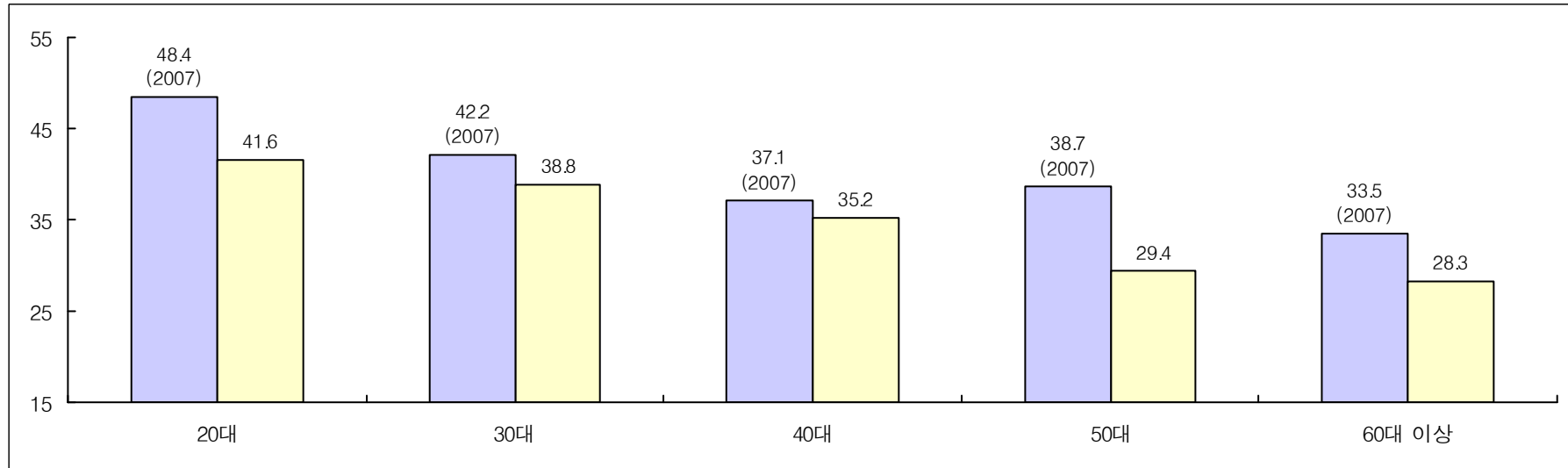


○ 연령대에 따른 우하향 추세가 뚜렷하고, 노년층의 경제적 행복은 심각한 수준

- 연령대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경우 20대가 가장 경제적으로 행복하게 느끼고 60대는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우하향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남
 - 경제적 행복에 대해 20대가 41.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부여하였고 그 다음으로 30대(38.8), 40대(35.2), 50대(29.4) 60대(28.3)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 특히 50대와 60대의 경제적 행복지수는 30을 하회할 뿐 아니라 경제적 행복 예측도 각각 20.2p, 15.0p 하락하여 100을 하회함으로써 앞으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음
- 유럽 등 복지국가 국민의 행복지수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40대에 최저점을 이루고 그 전후가 높은 U자형 추세임을 감안할 때 한국의 우하향 추세는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이 크고, 특별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표현으로 해석됨
 - 더욱이 급격한 노령화가 진행 중인 한국 사회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경제적 행복의 우하향 추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전체적인 해결 노력이 시급함
- 2007년 하반기 조사와 비교하여 20대와 50대의 경제적 행복지수 및 경제적 행복 예측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남
 - 경제적 행복지수의 경우 20대는 6.8p, 50대는 9.3p가 하락하였는데, 20대의 경우 경제적 불안이 14.8p나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50대는 경제적 평등이 11.0p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
 - 특히 20대의 경제적 행복 예측이 14.6p 하락한 것은 사회에 새로 진입하는 20대의 도전과 활력이 최근의 경제 환경에 의해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연령별 경제적 행복지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경제적 안정	50.9	▽4.7	46.0	▽1.9	43.8	2.1	38.0	▽8.2	33.9	▽4.7
경제적 우위	51.3	▽4.7	48.1	▽0.9	47.0	5.6	39.3	▽6.1	42.0	▽1.6
경제적 발전	58.8	▽8.2	53.0	▽7.4	42.9	▽4.5	30.5	▽4.9	20.8	▽1.8
경제적 평등	17.4	▽8.8	12.3	▽9.1	13.2	▽8.5	15.7	▽11.9	23.0	▽10.3
경제적 불안	24.0	▽14.8	17.9	▽7.8	13.6	▽11.1	14.8	▽3.2	14.5	▽4.3
전반적 행복감	42.8	▽5.2	42.1	▽1.4	38.3	▽0.6	31.1	▽11.7	29.8	▽6.0
경제적 행복지수	41.6	▽6.8	38.8	▽3.4	35.2	▽1.9	29.4	▽9.3	28.3	▽5.2
경제적 행복 예측	159.8	▽14.6	152.4	▽1.2	123.4	▽7.9	98.2	▽20.2	78.0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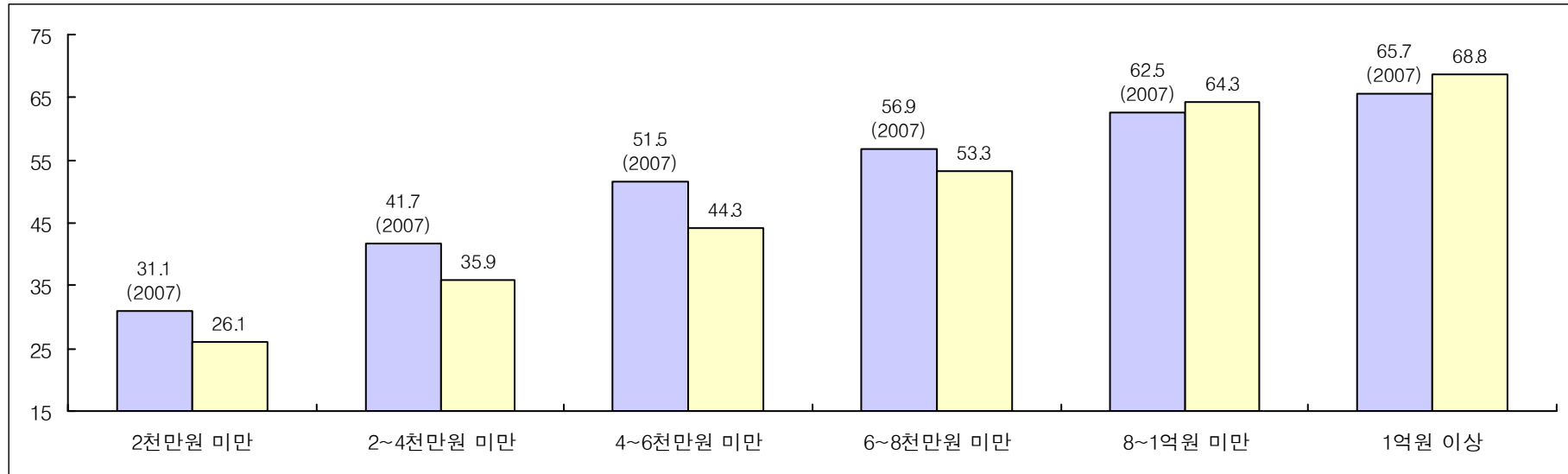


○ 경제적 행복지수도 소득과 자산에 따른 양극화의 움직임이 뚜렷해져

- (소득) 경제적인 행복을 연소득별로 살펴보면 경제적인 행복과 소득수준은 정확히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행복은 소득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음
 - 연간 2,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26.1을 기록한 반면에 그 범위가 2,000~4,000만 원인 경우 35.9, 4,000~6,000만 원인 경우 44.3, 6,000~8,000만 원인 경우 64.3를 부여 하였고, 1억원 이상은 68.8로 응답함
 - 2007년 하반기 조사와 비교해 보면, 8천만 원 이하의 소득 군에서는 경제적 행복이 감소하나 8천만 원 이상 소득군에서는 경제적 행복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경제적 행복 예측의 경우 8천만 ~ 1억 원 구간에서 35.1p 감소하고, 1억 원 이상 구간에서 50.0p 감소하는 등 고소득 군에서 대폭 감소하여 고소득군이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해 더욱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남

<소득별 경제적 행복지수>

	2천만원 미만		2천~4천만원 미만		4천~6천만원 미만		6천~8천만원 미만		8천~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28.8	▽4.0	46.0	▽2.0	56.5	▽8.1	69.1	▽0.4	83.3	3.8	90.6	1.3
경제적 우위	35.3	▽1.0	46.1	▽3.5	59.6	1.7	71.1	6.3	71.7	▽10.1	81.3	6.3
경제적 발전	29.3	▽5.7	45.1	▽6.7	52.6	▽7.2	64.7	▽3.3	73.3	0.6	84.4	▽15.6
경제적 평등	17.4	▽9.8	15.2	▽9.3	15.7	▽6.6	12.3	▽16.6	15.0	▽7.7	6.3	▽22.4
경제적 불안	14.4	▽4.6	17.5	▽10.3	18.2	▽11.4	17.2	▽23.4	33.3	6.0	50.0	7.1
전반적 행복감	27.1	▽5.0	37.9	▽5.2	48.0	▽8.1	59.8	0.4	73.3	5.1	75.0	10.7
경제적 행복지수	26.1	▽5.0	35.9	▽5.8	44.3	▽7.2	53.3	▽3.6	64.3	1.8	68.8	3.1
경제적 행복 예측	101.5	▽14.1	137.2	▽10.4	133.8	▽15.0	145.1	▽4.9	146.7	▽35.1	15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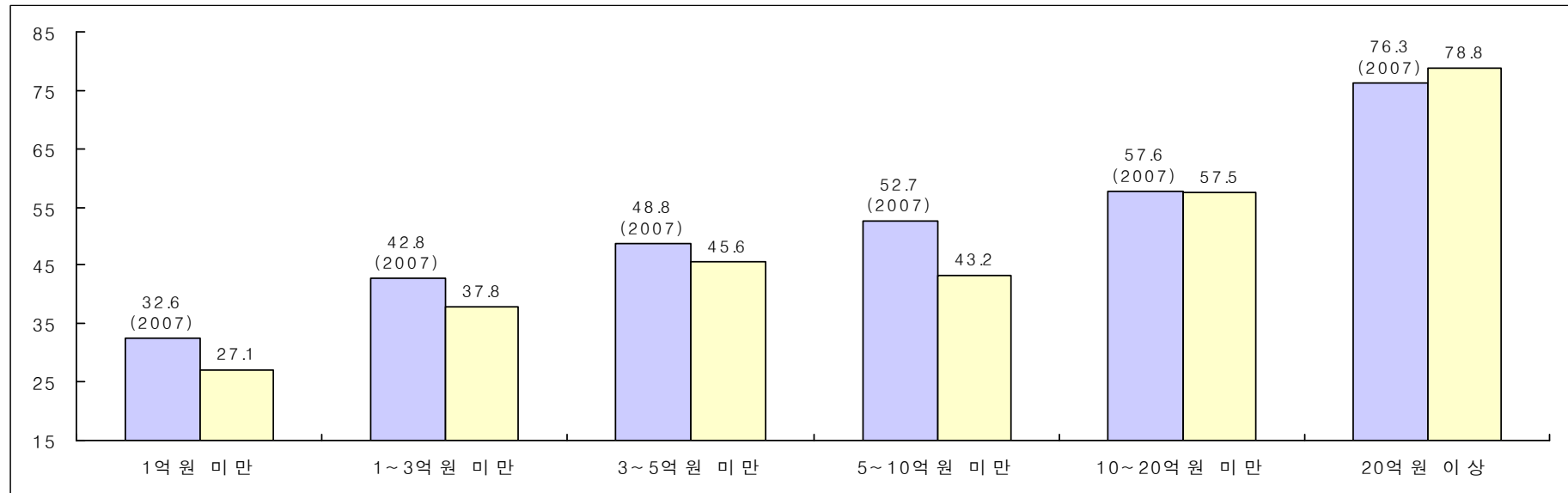


- (자산) 소유하고 있는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경우에도 경제적 행복과의 비례관계를 확인

- 1억 원 미만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27.1을 부여한 반면에 1~3억 원 사이에서는 37.8, 3~5억 원 사이에서는 45.6, 5~10억 원 사이에서는 57.5을 기록 하여 자산규모와의 비례관계가 분명히 드러남
- 2007년 하반기 조사와 비교해 보면, 10억 원 미만의 자산을 가진 계층의 경제적 행복지수 하락이 두드러졌고, 20억 원 이상의 자산계층은 경제적 행복이 오히려 상승하여, 경제적 고통이 저자산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

<자산별 경제적 행복지수>

	1억원 미만		1~3억원 미만		3~5억원 미만		5~10억원 미만		10~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경제적 안정	31.9	▽3.7	47.7	▽1.5	59.6	▽1.1	49.0	▽7.9	81.9	4.3	93.8	6.3
경제적 우위	34.5	▽0.5	50.5	0.2	65.9	2.6	57.5	▽7.8	66.7	▽14.9	93.8	3.2
경제적 발전	35.1	▽4.6	46.2	▽8.2	52.4	4.7	36.5	▽19.5	51.4	▽10.4	100.0	12.5
경제적 평등	14.7	▽9.9	16.9	▽10.1	14.3	▽12.6	18.5	▽8.8	22.2	▽6.7	6.3	▽9.4
경제적 불안	13.9	▽7.4	16.9	▽11.5	18.5	▽7.8	25.0	0.5	33.3	▽3.5	56.3	12.5
전반적 행복감	28.3	▽5.6	39.9	▽3.9	49.1	▽3.5	49.0	▽10.3	63.9	6.0	87.5	0.0
경제적 행복지수	27.1	▽5.5	37.8	▽5.0	45.6	▽3.2	43.2	▽9.5	57.5	▽0.1	78.8	2.5
경제적 행복 예측	117.2	▽6.0	122.7	▽28.3	142.6	7.5	120.0	▽17.0	144.4	▽24.0	2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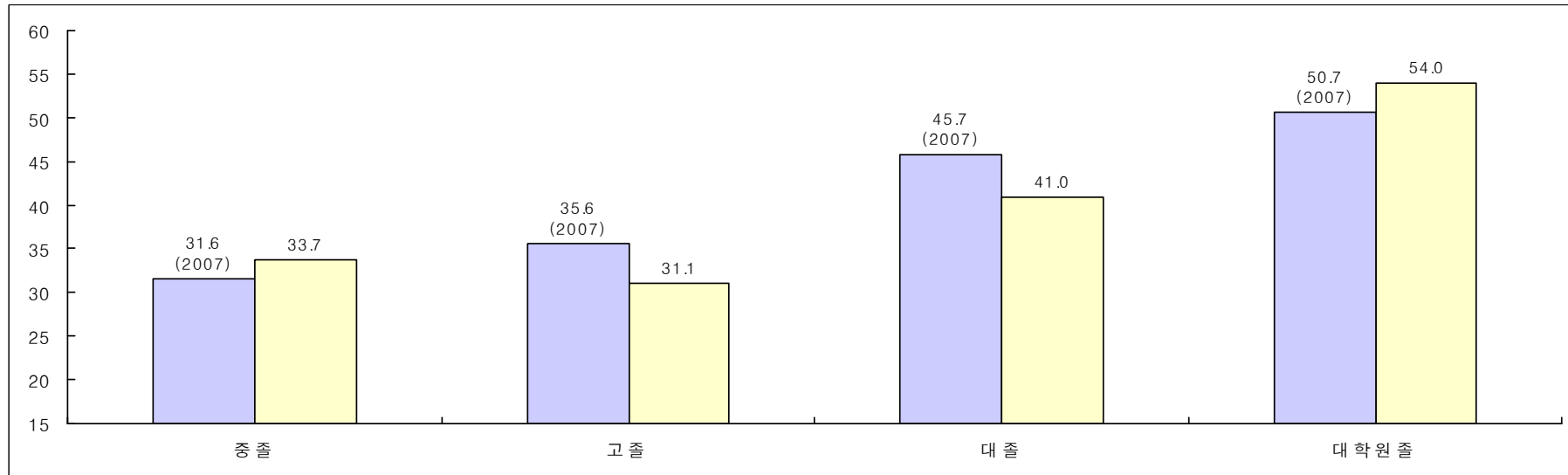


- (학력) 응답자의 학력수준과 경제적 행복의 관계도 비례하는 것으로 드러남

- 중졸이하에서는 33.7을 부여하였지만 고졸 이하에서는 31.1, 대졸이하의 구간에서는 41.0 그리고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4.0을 기록하였음
- 특히, 대학원 졸업이상의 학력자의 경우 경제적 행복지수가 지난 조사결과 때보다 3.3p 상승하였음
- 학력과 직업 그리고 소득이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식기반 사회에 있어서 높은 학력은 좋은 직업과 높은 소득 그리고 그만큼 높은 안정성과 발전성을 의미하며 이것이 그대로 반영
- 그러나, 지난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대졸 및 대학원졸 이상의 학력에서 경제적 행복 예측이 각각 13.1p, 21.7p 하락하여 고학력자 일수록 미래 우리사회의 경제적 행복에 대해 비관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음

<학력별 경제적 행복지수>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경제적 안정	34.4	0.4	36.4	▽3.8	52.9	▽0.2	57.3	▽9.6
경제적 우위	41.9	4.1	40.5	▽0.3	51.7	▽1.6	64.5	▽2.4
경제적 발전	31.6	5.3	36.0	▽2.5	53.1	▽6.8	56.5	▽18.5
경제적 평등	21.1	▽11.7	15.8	▽6.7	14.5	▽11.2	21.0	▽1.1
경제적 불안	48.6	33.3	16.7	▽7.2	20.8	▽8.4	18.5	▽14.6
전반적 행복감	31.8	▽2.2	33.2	▽4.8	43.5	▽3.7	64.5	16.0
경제적 행복지수	33.7	2.1	31.1	▽4.5	41.0	▽4.7	54.0	3.3
경제적 행복 예측	100.2	2.7	122.5	0.9	144.6	▽13.1	154.8	▽21.7



- (경제적 행복의 양극화와 미래에 대한 불안) 고소득군, 고자산군, 고학력군의 경우, 6개월 전보다 현재의 경제적 행복 지수는 상승하였으나,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은 가장 큰 하락 추세를 보인 것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현재의 경제적 만족감을 표하면서도 미래에 대해 불안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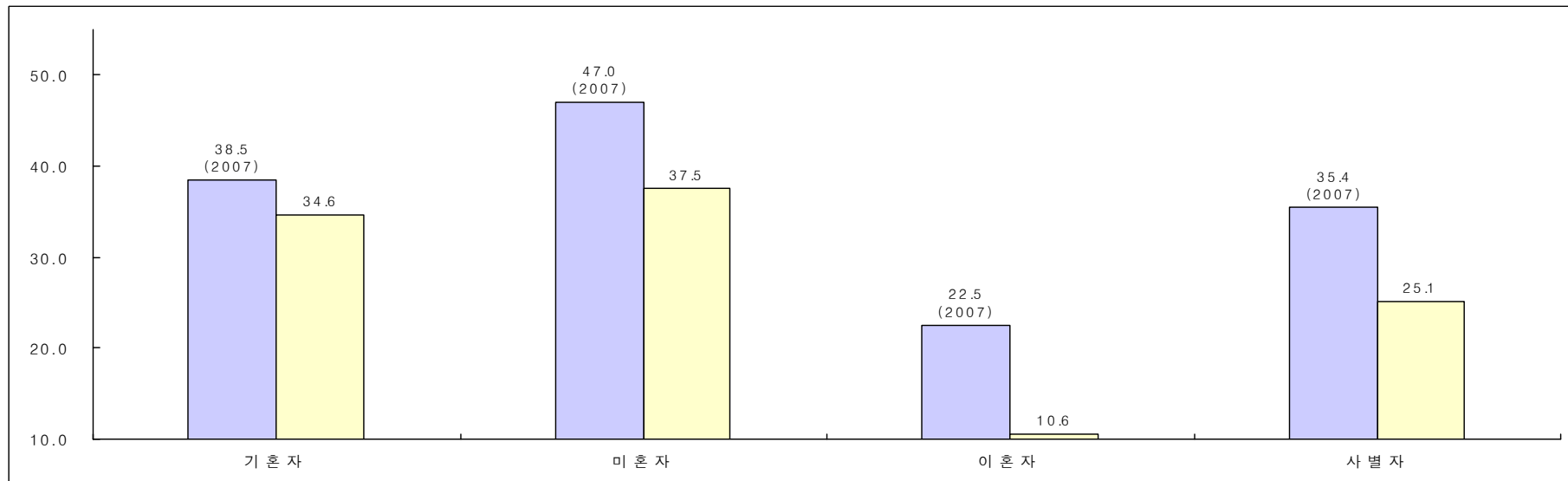
· 고소득군, 고자산군, 고학력군의 경우, 현재는 경제적으로 선택받은 집단임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미래의 경제 환경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와 투자, 2세 교육 등에서 해외를 바라보게 만드는 원인의 하나일 수도 있음

○ 미혼(未婚)자들의 경제적 행복 지수 하락이 두드러져

- 미혼자들의 경제적 행복도가 기혼자들의 행복도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격차는 지난 조사에 비해 크게 줄어들음
 - 경제적인 행복을 바라보는데 있어 '기혼(既婚)자'들이 34.6을 기록한 반면에 '미혼(未婚)자'들은 37.5을 기록하여 미혼자들이 보다 경제적으로 행복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지난 조사와 비교하여 기혼자들은 3.9p 하락한데 그쳤으나 미혼자들은 9.5p나 하락하여 두 집단간의 격차가 크게 줄
- 미혼자들의 행복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은 20~30대 젊은층의 경제적 행복도가 크게 떨어진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청년실업, 신규인력 수요 급감 등으로 경제적 초년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됨
 - 이는 미혼자들의 경제적 발전과 경제적 불안이 각각 10.3p, 14.2로 두 자리수 대 하락을 한것에서 간접적으로 증명됨
 - 또한 미혼자들의 경제적 행복 예측도 13.6p 하락하여 기혼자들 보다 하락폭이 컸다는 것도 가족부양, 자녀교육, 주택문제 등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미혼자들 마저도 경제적 활력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시사함
- 이혼자와 사별자 등 경제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혼인상태의 경우 기혼자와 미혼자 보다 경제적 행복 지수와 미래 경제 예측이 크게 낮음

<혼인상태별 경제적 행복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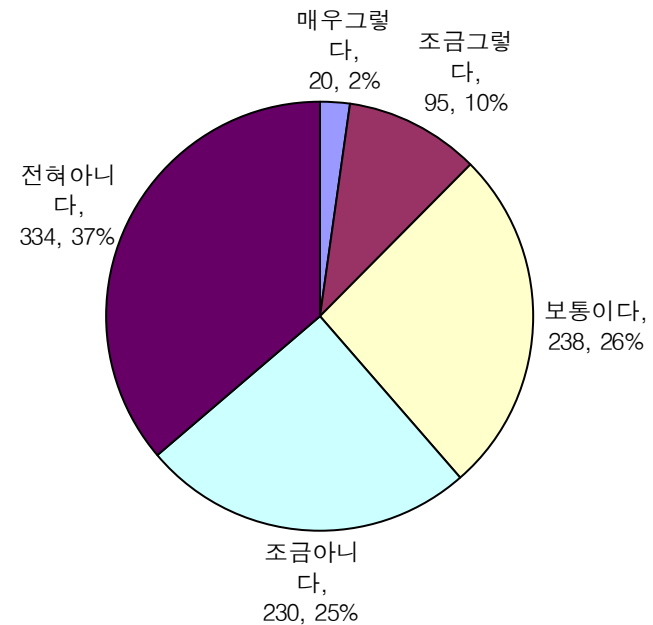
	기혼자		미혼자		이혼자		사별자	
경제적 안정	42.7	▽2.3	45.3	▽7.2	6.3	▽10.5	26.9	▽0.9
경제적 우위	46.2	1.2	46.5	▽8.1	6.3	▽31.3	34.6	▽11.2
경제적 발전	39.5	▽3.5	53.8	▽10.3	31.3	▽14.6	18.3	▽13.6
경제적 평등	15.6	▽9.5	17.6	▽8.9	0.0	▽25.0	19.2	▽16.9
경제적 불안	15.3	▽7.3	23.1	▽14.2	0.0	▽16.7	17.3	▽0.8
전반적 행복감	37.4	▽3.2	37.8	▽9.4	12.5	▽4.2	26.9	▽12.0
경제적 행복지수	34.6	▽3.9	37.5	▽9.5	10.6	▽11.9	25.1	▽10.3
경제적 행복 예측	118.7	▽10.8	154.0	▽13.6	100.0	33.3	46.2	▽64.9



○ 경제적 행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정부의 경제정책

- 신정부의 경제정책과 경제적 행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귀하의 경제적 행복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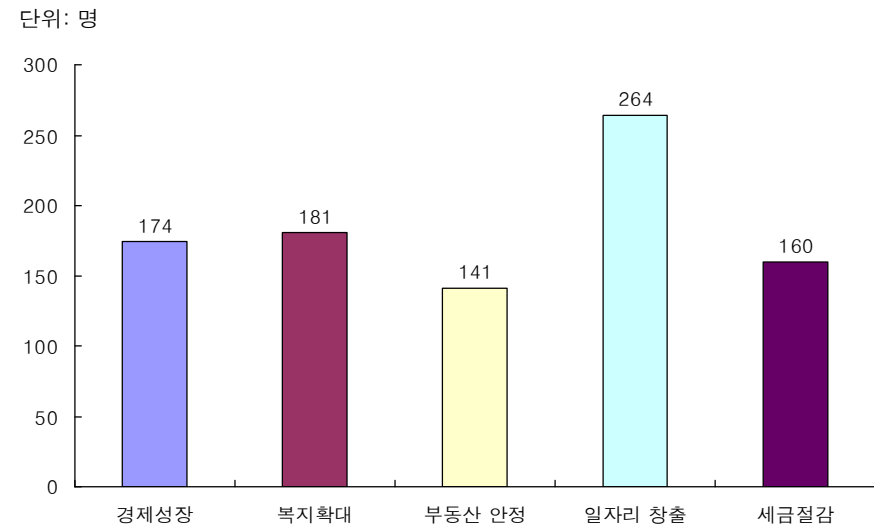
- 전체 917명의 응답자 중에서 37% 가 '전혀 아니다' 25% 가 '조금 아니다'로 응답하여 전체의 62%가 신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신의 경제적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전체 응답자 중 '보통이다' 26%를 제외하면, '12%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함
- 이는 신정부의 '경제 살리기' 정책이 아직까지 실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국민들의 경제적 행복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 경제적 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

- 경제적 행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경제정책 집행의 우선순위를 파악해 보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행복해 지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었으면 하는 경제정책은?' 이라고 질문한 결과,

- 전체 920명의 응답자 중에서 264명 (29%)이 일자리 창출이라고 응답하고 181명(20%)가 복지확대라고 응답함
- 경제성장과 세금감면은 각각 174명 (19%)과 160명 (17%)로 일자리 창출과 복지확대보다 후순위로 나타남
- 이는 경제적 행복의 증진을 위해서는 단순히 수치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보다 일자리와 복지확대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정책의 집행이 더 중요함을 의미함



3. 경제적 행복지수의 종합적 시사점

○ 경제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충북지역에 거주하는 대졸 이상 학력의 20대 여성 미혼 전문직 또는 공무원으로 추정되나, 경제적인 행복감은 6개월 전 보다 하락함
 - 한편, 경제적으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전남지역에 거주하는 학력이 낮고 자산과 소득이 없는 60대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추정됨

○ 하락하고 있는 경제적 행복을 높이기 위한 정책 구현이 시급

- 6개월 전인 참여정부 말기와 비교하여, 새정부 초기에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행복지수는 5.1p 하락한 34.8이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경제적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
 - 경제적 행복 지수의 5개 하위요인이 모두 하락했으나, 특히 하락 폭이 큰 경제적 불안(7.6p 하락)과 경제적 불평등(8.9p 하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감경기를 활성화 하고, 노후대비에 대한 사회 전체적 해법을 제시하며, 서민을 보호하는 생활밀착형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강화하여야 함
 - 또한 경제성장의 확실적인 해법에 앞서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외 경제충격을 완화하고, 물가와 생활비를 낮추며,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 불안을 해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경제적 행복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복지 균형 확대가 필요

- 6개월 전과 비교하여 소득별, 자산별, 학력별, 직업별, 연령별 경제적 행복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모습이 뚜렷함

- 상기 분류기준의 로우엔드(low end)에 위치한 집단은 경제적 행복도의 하락폭이 큰 반면, 하이엔드(high end)에 위치한 집단은 경제적 행복도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
- 이는 우리 사회의 경제구조가 저소득층, 저학력층, 저자산층 등 경제적 약자 계층에 대한 복지기능이 미흡하고, 교육권, 의료권 등 기본적인 생존권에 대한 보장도 미흡하여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을 확대시키는 구조에 기인함
- 또한, 연령별로 사회 초년층인 20대와 노년층의 경제적 행복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회적응기와 은퇴기에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경제적 행복의 균형을 위해서 양극화의 말단에 있는 저소득층, 저학력층, 저자산층, 노년층, 사회초년층 등 경제적 약자 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 의료 등 경제 불평등이 기본권을 침해 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사회복지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 경제적 행복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불안을 야기하여 사회 전 구성원의 경제적 행복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정부는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을 조속히 시행해야 함

○ 미래에 대한 의욕 저하를 희망으로 전환 시켜줄 수 있는 경제정책 실현이 필요

- 6개월 전과 비교하여 경제적 행복 예측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을 뛰어 넘기 어려워 지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한국 경제의 제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임
 - 최근 6개월 간 고유가, 물가상승, 세계경제 불안, 파업 등 경제현안에 대한 새정부의 대응이 미흡하고 정책 제시가 실패함으로써 열심히 일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고자 하는 국민들의 의지와 기대가 같은 크기의 절망으로 표출됨
 - 특히 소득, 학력, 자산, 연령, 직업 등의 분류기준에서 각 하이엔드 집단의 경우, 현재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는 행복감을 표현하나 미래의 경제적 행복 예측에 대해서는 로우엔드 집단 보다 더 비관적으로 응답하고 미래를 어렵게 보고 있음
- 미래에 대한 의욕 저하를 조기에 수습하고 실망을 희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치적인 경제성장에 구속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으로 열심히 일하면 경제적으로 행복해 질 수 있다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여야 함
 - 새정부 초기의 '경제만 살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식의 접근을 지양하고, '국민의 경제적 행복을 향상을 위해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자세로 경제적 약자 보호, 성장효과의 분배 등, 미세한 경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요구됨

□ 작 성	:	이 주 량 연구 위원 (3669-4334, jryanglee@hri.co.kr) 현 석 원 연구 위원 (3669-4024, kyotohyun@hri.co.kr)
□ 총 괄	:	유 병 규 산업전략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코스모리서치	:	홍 유 림 전문 연구 원 (3669-4018, ylhong@hri.co.kr)